

## 2. G7 재무장관 회담

- (배경) 동남아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공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계 경제 안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주요 의제) 중국 위엔(元)화 평가 절하 가능성 및 인도네시아의 통화위원회 제도 도입 의도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책 마련,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 개진, 새로운 국제통화체제 개혁 방향 논의
- (회담 성과) 각국의 이해 관계가 맞갈려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음.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일본의 경기부양책 실시, IMF 개혁 방안 등 핵심 의제들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함

### ○ 배경

- 동남아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일본과 중국은 물론 미국의 경기 침체에 이어 세계경제공황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 이에 G7국가와 러시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2월 21~22일 양일간에 걸쳐 런던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세계 경제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 주요 의제

#### - 중국 위엔(元)화 평가 절하

-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상승으로 중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금융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위엔(元)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대한 서방 선진국들의 공동 대처 필요

#### - 인도네시아의 통화위원회 제도

- 인도네시아 정부가 물가 급등에 따른 폭동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종의 고정환율제도인 통화위원회제도를 도입하려는데 대해 선진국들이 대응책을 마련
- 수하르토 정권이 IMF가 요구하는 금융개혁과 부실기업 도산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고 통화위원회제도를 통해 환율 안정을 기하려는데 대해 선진국들이 경고하고자함

#### -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일본 책임론

-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심화된 데에는 일본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 즉, 일본이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하지 않고

저평가된 엔화를 이용해 경상수지 흑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아시아국가들의 경상수지를 악화시켜 이들 국가의 경제회복을 막고 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일본은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아시아 지원 자금을 출자하거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입 촉진을 위해 무역금융을 선진국들이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

- 새로운 국제통화체제 개혁 방향

- IMF가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사전 예방에 실패하고, 인도네시아 등 이미 IMF관리하에 있는 나라들의 경제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IMF 개혁 논의
- IMF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IMF의 권한을 강화하여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sup>1)</sup>를 도입할 것을 주장
-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IMF 권한의 강화보다는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통화체제 수립을 주장

○ 회담의 성과

- 국제적인 공조와 정책조정이 절실히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회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음

- 일본이 국내 재정문제를 들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거부함으로써, '일본의 경기부양을 통한 아시아 경제 회복'이라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미국과 유럽의 견해 차이로 IMF의 권한 조정안 합의 실패
- 아시아지역의 수입감소를 막기 위해 한국에 제공되는 10억달러를 포함해 총 1백50억달러 규모의 무역금융을 이 지역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는 자국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의문이 제기됨
- 아시아지역에서 단기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다 일시에 자금회수에 나서 사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선진국 금융기관들도 아시아 통화위기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도 제기되었음

(이 준 호 johlee@hri.co.kr ☎724-4001, 양 민 석 myang@hri.co.kr ☎724-4027)

1) IMF의 주도 아래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자금 유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경고하기 위한 것임. IMF는 이를 위해 각국의 공공 부채와 가용 외환보유고 등 금융·외환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임